
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 (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297호)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

-2023.9.25(월) 한국중견기업연합회-

1.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 (부칙 제3조)

□ 개정안

-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(2024년→2029년)

□ 중견기업계 의견

- 비용부담, 실무관행,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감사의 내실화 추구 필요
- 종속회사마다 사업·경영 환경이 다름에도 일방적으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맞추고 그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업무·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
 - *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「회계제도 보완방안」은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·운영 소요 비용이 기존 감사 보수의 90% 수준이라고 밝힘 (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'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', '23.06.12)
- 실무 환경을 고려할 때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재무제표 작성 능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
 - 현행 회계·감사업무 실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자회사를 대상으로 지배회사의 심사지침(audit instruction)을 전달하고, 자회사는 이에 따라 감사를 받은 후 재무제표를 모회사에 전달해 최종 취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.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는 K-IFRS 상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감안해 연결 내부회계관리 제도보다 자회사의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별도

재무제표 작성 능력 제고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측면에서 효율적

-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모태가 되는 사베인즈-옥슬리법 (Sarbanes-Oxley Act, 2002)은 초대형 기업의 회계부정 대응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자산 규모에 따른 단순한 적용 범위 확대는 신중한 접근 필요
- 실제로 한 보고서는 중견기업의 ‘인력 부담 등 여건상 기존 설계된 내부통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’을 지적하며, ‘횡령 등 중대한 부정위험 대응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통제 추가보다 사각지대 등에 대한 점검 강화’ 등을 제언
- * 삼일PwC, 「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-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」, Vol.4, '23.6월
-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신규 제도 도입보다 기업의 자체 통제 능력 증진 방안 모색 필요

2.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축소 [제14조]

□ 개정안

- 투자주의환기종목과 관리종목은 지정요건이 중복되므로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에서 삭제

□ 중견기업계 의견

-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축소를 환영하며,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업 부담 경감 간의 균형을 위한 일련의 정책 개선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‘주기적 감사인 지정제’ 개선 요청
-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8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후 회계 투명성 제고 성과에 불구하고 감사인 간 품질경쟁 저해와

과도한 기업의 회계감사 비용 증가를 유발

- * 실제로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보수는 2021년 제도 시행 후 시행 전인 2017년 대비 154.6%(1억 70만원→2억 5,640만원), 감사시간은 78.7% 증가 (1,416시간 → 2,531시간) (한국중견기업연합회, 상장중견기업의 감사보수 현황 및 개선방안, '23.4월)
- 금융위원회도 지난 6월 「회계제도 보완방안」에서 정책 결과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부족을 이유로 추후 정책 보완책을 재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
-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부작용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강제 지정을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되, 대신 일정 주기 후 감사 회계법인을 교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